

도시과학 중심의 서울시립대학교

권 원 용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기획발전처장

1. 계획의 배경

이 글은 어느 대학교의 발전계획처럼 화려한 비전과 미래상을 내보이는 틀에 박힌 내용을 소개하려는 의도에서 쓰이지 않았다. 다만 수많은 명문 사립대학교와 막강한 국립대학교도 아닌 모호한 위상을 지닌 하나의 공립대학교가 최근에 장래 발전을 위하여 스스로의 진로를 정하고, 어떠한 여건 속에 무슨 노력을 어떻게 기울이고 있는가를 꾸밈없이 이야기체로

각 대학의 장기발전계획

1. 21세기 연세대학교의 발전상 : 세계적 연구·교육 기관으로의 도약
2. 전남대학교, 그 미래와 현주소
3. 이화 21세기 발전계획의 추진 과정과 주요 내용
4. 열린 대학을 지향하는 젊은 대학 명지대학교
5. 한림 21세기 계획
6. 도시과학 중심의 서울시립대학교

기술하고자 한다.

서울시립대학교는 1918년에 경성공립농업학교로 개교한 이래 해방 후 서울 농업대학 시대를 거쳐 경제 개발 연대인 1974년에 서울산업대학으로 개편되었고, 1981년에 현재의 시립대학이라는 교명을 얻게 되었다. 당시 서울특별시라는 지방정부가 운영주체인 국내 유일의 공립대학교로서 특이한 성격을 지니고 있었으며, 1987년에 와서야 종합대학교로 승격되었는바 금년이 1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기도 하다. 현재

서울에서는 좀처럼 보기 드문 수려한 경관과 녹지를 끼고 있는 약 14만 평의 캠퍼스 부지에 8,000여 명의 학생이 5개 단과대학과 4개 대학원에 재학하고 있다.

지방자치제도가 정착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중앙집권적인 통치구조에 철저히 길들여진 국민들의 사고방식은 실제 정부관료 이상으로 중앙집권적이다. 서구적 개념인 열린 '시민사회'로 가기에는 아직도 요원한 우리나라 처지로서는 '市立'이라는 이미지가 위계질서상 하위개념으로 받아들여지는 정서이고, 중앙과 지방이라는 용어의 비대칭성에서도 그와 비슷한 동인을 찾아볼 수 있다. 더구나 도시 인구수에 따라 임명직 시장의 직급이 결정되던 시절이 먼 과거가 아니었으므로, 공립대학에 대한 투자는 아마도 간간히 시혜적 차원으로 명백을 이어왔거나 관심도가 낮아 상당기간 방치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지난 20여 년간 대학 발전의 속도는 매우 더디었다고 생각된다.

2. 외부 환경의 변화

현재 국내의 각 대학은 급격한 외부 환경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면 존립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장래 발전방향 모색과 적응능력 향상을 위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것은 대학사회 전반에 정부의 교육정책의 변화로 말미암아 대학개혁의 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첫째, 한국의 21세기는 고도 정보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분명히 예견된다. 구태의연한 교육방식에 기초한 대학교육은 설 자리를 잃게 되는 까닭에 대학이 미래의 지식사회에서 수행해야 할 역할이 혁신적으로 달

라져야 한다는 시대적 인식이 팽배하고 있다. 물론 양적으로는 우리나라 대학교육이 대중화·보편화되어 가지만, 향후 정보화 시대의 사회적 고급인력의 질적 수요는 달라지고 있다. 종래의 규격화·획일화된 인재양성으로는 충족될 수 없고 유연한 전공분야를 지니면서 보다 국제화된 감각이 있는 전문가를 요청하게 될 것이다.

둘째, 세계화·개방화·지방화 추세에 따른 교육·연구 기능의 경쟁심화와 적응 문제이다. 세계화는 범지구적 사고와 생활양식, 태도로의 일대 전환을 불가피하게 하고 있으며, 세계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는 학문분야와 인재양성이 급선무가 되었다. 더욱이 교육시장의 개방은 국경을 초월하여 대학간 협력과 치열한 경쟁을 동시에 야기하게 되고 국내에서 우물안 개구리식 대학 상호간 비교는 그 의미마저 상대적으로 퇴색할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제의 본격 실시에 따라 대학은 당해 지역사회에서 知的 네트워크의 중심점 역할 증대와 함께 평생교육을 비롯한 넓은 의미의 지역문화 창달·선도라는 주민의 욕구충족을 외면할 수 없게 되었다.

셋째, 대학교육 대상 인구가 절대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수준 높은 외국 일류대학의 분교 진출뿐만 아니라 2000년이 지나면 고교 졸업자가 격감하고 오히려 대학정원보다 밀도는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되므로 국내·외 대학간의 경쟁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대학정원의 규제조치가 사실상 무의미해지면서, 특히 중·하위권 대학의 입지가 상대적으로 좁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학생소비자 시대가 자연스럽게 도래하게 되어, 비교우위가 있는 교육기능을 개발하거나 지니지 못한 대학은 학생유치 경쟁에서 밀려 도태되기 십상이다.

넷째, 대학의 변신을 요구하는 국가의 교육정책에 어떻게 부응하느냐 하는 현실적 문제이다. 과거 중앙집권적 규제와 감독에 피동적으로 안주해 왔던 대학이 이제 교육민주화와 대학 자율성의 제고라는 커다란 부담을 안게 되었다. 대학의 자율적 경쟁과 시장경제원리의 도입에 입각한 교육개혁은 고객중심교육, 교육내용의 다양화·정보화·첨단화를 조장하며 교육부는 객관적 평가에 의한 각종 지원금 배분이라는 ‘황금고삐’만 휘두르는 정책기조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서울시립대학교는 이제 민선시장시대를 맞이하여 시장국, 시의회, 일반시민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도시정치(urban politics)의 삼각과도에 휩싸이게 되었다. 먼저 기회요인으로서는 교통, 환경, 방재 등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현안 도시문제에 대한 실용적인 연구결과의 제시와 인력의 연수·훈련을 통해서 재단인 서울시와 시립대학의 유대를 강화시킬 수 있다. 반면에 서울의 세계화 추진을 위한 국제적 두뇌기능, 교류기능에 적합한 시설과 수용 기반이 취약하다. 위협요인으로는 시의원들의 주장처럼 시민들의 혈세로 운영되는 대학인 까닭에 납세자인 시민을 위해 봉사·지원하는 시설과 프로그램 확대에 대한 압력이 가중되리라는 전망이다.

3. 전략계획의 필요성 대두

지금까지의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을 살펴보면, 과거의 모든 국가계획이 국민을 기만해 왔듯이 목표년도를 5~10년으로 정해 놓고 온갖 화려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춰왔다. 이른바 전통적인 마스터플

랜은 계획의 실천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마치 ‘모듬’ 요리처럼 듣기에 좋은 제안들을 나열한 것이 많았다. 또한 우리나라와 같이 돌변하는 교육정책 환경 속에서는 예측력을 상실하여 1~2년 이내에 계획보고서가 무용지물이 되어 캐비닛에서 잠자거나 化石化된다. 하지만 미래지향적이고 거창한 목표를 제시하여 대학 구성원에게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 결코 나쁘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대학을 경영진단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면서 상황과 여건(현황과 문제점)을 정밀 분석해서, 앞서 말한 외적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데 무엇이 필요한 과제인지를 심도 있게 파악하고 그 緩急輕重을 따지는 폭 넓은 ‘전략적 사고’가 요망된다. 예컨대 국내·외 대학들이 무한경쟁 시대로 들어서게 되는 사실을 직시할 때, 전략적 선택을 통해 비교우위가 있는 학문분야를 찾아내서 특성화·전문화해야 할 것이다. 반면에 비교열위에 놓여있는 부분을 솔직하게 인정하여 안락사(?)시키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첫째, 전략계획에서는 대학 외부와 내부에서 드러나는 이슈를 토대로 하여 목표와 전략이 수립되면 이를 촉진하기 위한 발 빠른 행동계획(action program)을 증시한다. 말하자면 의사결정자인 총장에게 목표달성을 위한 자원 동원의 가능성을 보다 정확히 하는 까닭에 종래의 마스터플랜보다 훨씬 능률적이고 실천지향적인 장점이 있다. 둘째, 전략계획은 상투적이고 정형화된 마스터플랜보다 더욱 더 계획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계획과정에 대학 구성원의 참여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계획의 정당성이 커지게 되고, 이에 따라 집행도 당연히 용이해질 것이다. 다시 말하여 계획행위 자체를 일종의 학습과정(learning process)으로

간주하고 최종 결과물인 보고서를 내는 데 급급하지 말아야 한다. 꾸준한 대화와 설득이 무시된 발전계획 수립은 우물가의 송능, 뜬 안 들인 쌀밥처럼 부작용이 나게 마련이다. 본교에서는 2년간 이와 같은 전략계획의 틀 속에서 계획방식의 전환을 도모하면서 하향식(top-down) 접근과 상향식(bottom-up) 접근을 병행하여 보았다.

1) 하향식 접근: 21세기 기획위원회 발전계획 草案

전체 교수의 압도적인 지지 속에 민주적 선거절차를 통하여 1995년 5월에 취임한 김진현 총장은 한 달여 만에 본교에 '21세기 기획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조치하였다. 설립취지를 보면, 대학교육 개혁이라는 정부시책에 맞춰 대학편제, 학사, 조직, 재정 등 전반에 걸친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임무를 띠고 있다. 그 이전에도 학사발전 10개년 계획(1989), 중·장기 발전계획안(1993) 등이 작성되었으나, 서울시 당국과의 협의가 여의치 못하거나 예산과 연계되지 못한 채 유아무야로 끝나버려 계획의 공신력과 실효성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이번의 계획체제와 활동은 급변하는 대학교육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발전전략의 구축과 더불어 대학 자체의 구조적 결함을 정비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한 종합진단팀에 유사하였다. 즉, 새로운 총장의 외부 영입에 따른 쇄신뿐만 아니라 사실상 대학재정 후원자인 조순 민선 서울시장이 곧 취임하게 되어 서울시 행정에 보다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협조체제의 재정립이라는 시립대학교 나름대로의 자생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21세기 기획위원회는 기본방향 수립에 관여할 총장 이하 교무

처장, 학생처장, 사무국장을 정책위원으로 하고, 실제적인 참여자는 기획연구실장이 주재하는 2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크게 ① 학풍/학사반, ② 조직/편제반, ③ 시설/재정반으로 8~9명씩 나누고 각각 반장과 간사를 두었다.

첫째, 학풍/학사반은 교육이념, 대학 이미지 고양, 대학문화 창달 방안과 아울러 강의 및 교육과정 운영, 교원총원 및 인사관리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였다. 둘째, 조직/편제반은 본부와 대학간 업무 분담, 본부와 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 조직, 대학의 적정규모 산정과 단과대학 및 대학원의 편제, 특성화 방안, 서울시와의 행정체계 개선 및 직원 인사제도 등 핵심부분을 다루었다. 셋째, 시설/재정반은 캠퍼스 재배치 등 공간계획과 더불어 시설·기자재의 확충에 따른 소요예산 판단과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발전기금 조성 및 대학경영 합리화 방안을 도출하는 업무가 주어졌다.

21세기 기획위원회는 여름방학이 시작된 6월 하순부터 10월까지 총 19차에 걸쳐 활발한 논의를 계속하는 가운데 8월 말에는 3개 작업반별로 중간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다. 그 내용의 주요 골자는 세계화·지방화 시대의 개막에 발맞추어 서울시민에게 봉사하고 서울시정에 기여하는 대학 발전상을 목표로 삼자는 것이었다. 10월 초에는 조직/편제반에서 '도시과학대학 설립안'을 제기하였고, 정책위원회를 거쳐 11월 9일에 이 제안을 하이라이트로 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회의장에는 뜨거운 관심 속에 약 100여명의 절대다수 교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영학부 이상범 교수(간사)의 대학 발전전략에 관한 보고내용은 도시관련, 교육 및

연구중심대학의 특성화 방안을 제시한 것이었다. 기존의 도시관련 학부(과)를 모아 도시과학대학을 신설하고, 현행 도시행정대학원은 도시정책대학원(가칭)으로 전문화시키며, 수도권개발연구소는 도시과학연구원으로 확대·개편하고 그 산하에 방재, 환경 등 부문별 연구센터를 두도록 하자는 요지이다. 이와 함께 부속기관인 박물관도 도시사회박물관으로 특성화하고, 시민생활교육원은 보다 활성화시켜 서울시민에게 봉사하는 대학으로 차별화·거점화하자는 전략을 결집하여 내세웠다. 이어서 4개 단과대학을 각기 대표하는 네 분 교수의 지명토론이 끝난 뒤, 방청석에서도 진지하고 열띤 토론과 충분한 찬반 의견 개진이 있었다.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 보면, 원칙적으로 도시과학대학(college of urban sciences)을 설립하는 데는 반대하지 않으나, 보다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바라는 신중론이 우세하였으며, 특성화에 따른 학과간의 불균형 발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대체로 보아 기존의 교육과정과 연구체제에 상당한 충격이 예상되므로 각자의 입장 표명과 상호이해가 엇갈린 발언이 나온 것은 자연스럽게 여겨졌다. 또한 공학과 사회과학이 뒤섞이는 도시과학의 학제적 성격과 본질에 대한 이해가 미흡하여 졸업생의 진로문제 등에 회의를 나타내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총장은 점진적 추진의 당위성을 충분히 인정하나, 여태껏 대학 발전계획이 집행되지 못한 채 모두 허구(fiction)로 끝난 사실을 지적하고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한 기민한 대처가 시립대학의 명운을 좌우한다는 특성화의 긴박성을 강조하였다.

21세기 기획위원회를 운영한 경험을 통

하여 볼 때, 하향식 계획방식이 갖는 단점은 조직의 구성원에게 충분한 대표성이 없어 커뮤니케이션 경로상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왜곡된 정보가 흘러 다니면서 오히려 계획의 원활한 수립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다. 월요일 아침 같은 계획으로는 안 된다. 대학에서는 금요일 오후 같은 계획이 될수록 환영받는다.

2) 상향식 접근: 학부(과) 발전 5개년 계획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은 대학본부를 중심으로 한 보직자와 몇 사람의 교수로 구성된 특명작업팀(Task Force)이 입안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물론 교무위원회의 검토, 설명회 내지 공청회를 거쳐 대학 구성원 전체의 의견을 모아 반영하고 수차에 걸쳐 계획내용의 충실도를 높이는 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하향식(top-down) 계획방식은 특정한 분야에서 전문지식을 갖춘 엘리트 집단이 집중 투입되어 대학 현안과제의 도출이나 전체 발전목표의 설정에서는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대학사회와 같이 다양한 성격의 학문분야가 섞여 있고 학과 중심으로 한정되거나 또는 단과대학 중심으로 폐쇄된 조직편제에서는 위계질서가 정연하지 못한 까닭에 계획내용이 자칫 편향되기 쉽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대학 구성원이 참여를 통하여 충분히 의견을 피력하여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계획의 입안과정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본교에서는 대학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내부자료로서 총장의 지시에 의하여 1996년 5월에 '학부(과), 대학원별 5개년 발전계획과 10개년 비전'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학과의 개요, ② 전임교원, 학생수, 졸업 후의 사회진출, 공간사용, 예산 등 현황, ③ 문제점 도출, ④ 경쟁 대상의 국내·외 관련학과 동향과 수준 비교, ⑤ 사회적 수요에 따른 장기발전 전망, ⑥ 교수충원, 학생, 연구지원인력, 부대시설, 소요예산, 기자재 확보와 같은 발전계획 실천과제, ⑦ 학생의 진로와 학문 성장방향 등 기대효과, ⑧ 종합건의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상향식(bottom-up) 발전계획의 작성을 통해서 하향식 계획이 접근할 수 없는 학부(과)가 지닌 문제점이 자연스럽게 노출되고 체계적으로 파악되었다. 즉, 각자의 실상에 대한 문제의식이 고양되고 국내·외 동일분야의 학부(과)를 비교하여 準範(benchmark)을 만들고 자기성찰의 유익한 기회를 갖게 되었다. 또한 학부(과)의 구성원 사이에도 합의기반이 조성되는 부수효과도 적지 않았다. 장기비전을 제시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는 가운데 폭넓은 공감대를 얻어냈다면, 실천가능성을 차치하고라도 그 과정 자체가 값진 것이라고 생각된다.

4. 도시과학대학으로의 특성화

서구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도시(town)와 대학(gown)의 발전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었다. 12세기부터는 도시에서 상공업의 발달로 말미암아 학문 연구만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지식인 계급이 대두되고, 이들이 제자를 양성하는 일종의 조합(universitas)이 대학의 기원이 되었다. 도시는 야망에 찬 젊은이에게 꿈의 실현과 사회적 신분상승 기회를 주는 장소이

며, 대학은 젊고 발랄한 학생들의 집합체이었다. 대학이 발전하게 되면 그 도시도 지역경제가 윤택해지고 국내·외적 명성을 획득하여, 대학은 도시의 지위를 높이는 심벌이기도 하다. 현재 서울시 인구집중의 가장 큰 원인의 하나가 우수한 명문대학의 존재에 기인하고 있음을 볼 때 자명한 사실이다.

현대사회는 급속한 도시화의 진전으로 주택, 토지, 교통, 환경, 안전, 복지, 인간소외와 범죄 등 각종 도시문제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밀 도시국가국가가 되었으며, 특히 서울시는 지난 '6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과 도시화를 토대로 하여 세계적인 거대도시(mega-city)로 비대해졌으나, 동·서양과 선·후진국이 지닌 중층적 '도시문제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와 본교는 국제화·정보화·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보다 긴밀한 관계를 모색하고, 유족한 시민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고차원의 역할과 기능을 분담해야 한다.

도시과학대학은 민선시장에 의한 지방자치시대의 개막과 함께 본교의 새로운 좌표 설정이자 발전과 도약의 계기를 마련할 특성화 전략의 핵심이다. 이는 교육부의 대학개혁 추진정책에 적극 호응하면서 앞서 말한 대내·외적 상황 변화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발생하는 '도시문제군'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중심대학으로 육성·발전시키는 것이 21세기 시민주도형 도시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지름길이 되리라고 판단된다. 도시과학 특성화를 통한 세계 수준의 교육·연구 복합체로 성장하게 되면, 대도시의 사회적 수요 변화에 대한 학문적 대응력을 배양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전문인력을 공급하게 된다. 나아가서는 학과중심 교육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도시문제의 종합적 해결방안

에 직·간접으로 공헌하고 서울시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두뇌집단(think tank)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과학은 작년 12월 개최된 국제심포지엄(Seoul Metropolitan Fora '96)에서 복잡다단한 현재 도시문제를 도시공학·사회과학적 양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해결하는 데 필요한 이론과 정책을 개발하려는 새로운 학문으로 그 성격이 국제적인 공인을 받게 되었다. 10개국 40여 명의 국내·외 석학들은 이구동성으로 학제적인 도시과학의 태동에 공감하고,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금년 3월부터 세계 최초의 학부 수준의 단과대학이 출범한다는 사실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었다. 국제적으로 평판이 높은 저명한 도시학자들은 도시과학이야말로 “오늘날 인류의 지배적 생활양식인 도시의 제반 현상을 학제 연구를 통해 분석·탐구하고, 도시문제의 바람직한 해결책에 필요한 물리적·제도적 수단을 강구하는 종합학문영역”이라고 정의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금년 중 계획되고 있는 국제학술지 *Journal of Urban Sciences* 발간은 본교의 학문적 위상과 정보발신 기능을 높이는 구체적 특성화 작업의 하나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대로 21세기 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한 도시과학대학의 설립 추진이 성급하고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치밀한 사전준비와 민주적인 절차를 거쳤다. 예컨대 '95년 11월에는 기존학과 중에서 도시과학 편제로의 희망 여부를 조사한 바, 도시행정학과 등 8개 학과가 신청하였다. 같은 해 12월에 교무위원회에서 '97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뽑기로 하고 '도시과학대학 및 연구원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

하도록 의결하였다. 1996년 1월부터 2개월간 심층 연구와 자문위원회의를 포함하여 모두 7차 모임을 가진 후, 그 결과로서 '도시과학대학 특성화 방안' (Vision 2002)이라는 시안이 작성되었다. 3월에 들어서서 다시 관련학과와 부설연구소별로 의견을 수렴하고 전체 학생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 다음 총장에게 최종보고서가 제출되었다.

도시과학대학의 학부과정은 도시관련 기존 학문영역의 습득과 취업전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예: 세무/부동산/지적정보학부). 궁극적으로는 전문대학원이 생겨야 종합학문적 특성이 극대화될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기존의 수도권개발연구소를 모체로 한 '도시과학연구원'의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 서울시민과 시정이 당면한 여러 도시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유기적인 연구가 가능하며, 활용될 이론과 정책을 개발하는 명실공히 市·學·研 연계체제를 구축하게 된다. 나아가서는 서울시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중국, 인도, 동남아 등 21세기에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될 것이 예상되는 국가에 컨설턴트로서 진출하거나 UN 기관 및 OECD 회원국과 공통적 도시문제의 비교연구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다행히 '서울시정 운영 3개년 계획'에 의거하여 '96년 4월에 도시방재연구센터와 환경공학센터가 이미 설치되었다. 향후 연구 전임교수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발족될 도시과학연구원은 축차적으로 대중교통, 도시재정, 도시정보시스템 등 도시정책연구센터와 프로젝트 수행 위주의 도시연구실(Urban Lab.)을 유연조직 형태로 수용하게 될 것이다.

도시과학대학 특성화를 위한 지원시책은 크게 ①인력, ②공간, ③예산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현재 도시과학대학의 편제

는 학과 할거주의를 타파하는 데 주안을 두고 1개 학부(건축·도시·조경)와 5개 학과(도시행정/도시사회복지/세무/토목공학/환경공학)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다 금년 새학기부터 야간학과로 신설된 도시사회학과와 지적정보학과가 추가로 포함되었다. 우선 교수충원을 보면, '96년도 상반기 신규 교수공채에서 총 32명 중 47%에 해당하는 15명을 도시과학대학에서 채용하였고, 하반기에서도 27명 가운데 13명을 차지하여 48%에 이른다. 한편, 캠퍼스 정비 기본계획에 의하면 도시과학관을 서울시립대학교의 상징건물(symbol building)로 하고 금년에 건축설계에 들어가서 약 200억 원을 투입, 연면적 4,000평의 인텔리전트 빌딩이 2000년까지 완공될 예정이다. 대학 예산 배정 측면에서는 아직 특별한 차등은 없으나, 예를 들어 도서관의 장서구입 및 정기간행물의 확보에서 도시관련 분야가 중점지원을 받고 있다.

5. 마무리

앞날을 미리 내다보는 뚜렷한 목표를 내세우지 못하는 조직은 퇴화하기 마련이다. 왜냐하면 발전이란 목표의 진화과정이기 때문이다. 이제 서울시립대학교는 21세기 시민사회에 봉사하는 일꾼을 배출한다는 목표 아래 도시과학을 중심으로 교육·연구하는 특성화 전략을 채택하였다. 도시과학대학은 실천적 측면에서 도시문제의 해결을 통하여 시민생활의 질을 높이고 서울시를 비롯한 세계 모든 도시행정에 공헌할 수 있다. 또한 학문적 측면에서도 이론적 기반을 구축하여 국내·외에 전파함으로써 장차 국제적

정보발신의 근원지가 되리라고 확신한다.

서울시립대는 더 이상 고개속인 공립대학이 아니라 서울시민의 사랑을 받으며,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문명 공동체가 적극 육성하는 명문대학이 되어야 한다. 이런 취지에서 금년부터 시의회의 성원을 받아 서울 시민자녀 신입생에게 등록금을 차등감면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운영주체가 지방정부이기 때문에 지방대학이고, 소재지가 우수한 대학이 몰려있는 서울이기 때문에 지방대학이 아니라는 양면성의 틈바구니에서 규제만 받고 지원은 소홀해지는 모순이 조속히 지양되기를 바란다.

끝으로, 본교는 서울시의 도움을 받아 내부개혁 차원에서 대학 스스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서울시와의 관계를 재정립하면서 예산, 조직, 인력 등 경영요소의 비능률을 제거하기 위해 '경영진단'을 외부기관인 현대경제사회연구원에 의뢰하여 진행중이다. 이는 '98년 대학종합평가에 대비하는 한편, 특성화와 같은 발전전략의 세분화와 더불어 교직원 복지향상 등 구체적 실천방안을 총점점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종합하여 보건대, 요즈음 같은 격변기에는 대학발전의 나침반을 硬性 계획이 아닌 軟性 계획에서 찾아야 한다는 교훈이 아닐까 한다. ■

권원용/서울대학교 건축학과와 동 대학 행정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기획발전처장을 맡고 있다. KIST 지역개발연구소 선임연구원, 국토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 및 건설교통부 국토이용계획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 "행정수도 건설의 파급효과 분석", "대도시권 관리방안 연구" 외 다수를 발표했다.